



“공기업 지방 이전 안 지키면 큰일난다”

장병완 前 예산처장관 ‘경총 금요 조찬회’ 강연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써 새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장관은 7일 오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연수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조화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장관은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 비해 크게 후퇴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 건설에 적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동으로는 공기업 민영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해당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면, 광주·전남으로 이전할 한국전력 등 17개 기관은 민영화 계획에 포함

되지 않아 취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망했다.

장 전 장관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으로 인해 공기업 지방이전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또 이를 상반기 중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영화 대상 기업들은 새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관계없는 기관들은 당초 일정대로 이전에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국정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정부와 및 관계기관에 한전 등 공기업 이전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광산업 등 특화해야 광역경제권 성공”

장병완 前 장관 인터뷰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은 6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한전은 근본적으로 민영화 대상이 아니며, 민영화로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관도 아닌 만큼 새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에 기장을 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장관은 광주·전남경총 주최 ‘지역균형발전과 조화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전망’이라는 주제 강연회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전과 같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약화, 요금인상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됐던 한전 민영화가 중단된 것도 이같은 점을 고려한 때 문이다”며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새 정부가 행정과제는 공동혁신도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기존 국책사업을 인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 전 장관은 이어 “공기업 민영화는 기업의 주인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뀐다는 단세포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과 관련, “호남권에 이질적인 산업·경제권을 기반으로 한 광주·전남북을 뚫어놓았으면서도 광역경제권 추진주체,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등이 제시되지 않아 오히려 논란과 혼선 등 부작용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장 전 장관은 “광역경제권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광주 광산업 등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집중 육성대상 사업으로 확정, 같은 경제권 지자체와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영기자 penfot@

당론 따르자니 의리가 울고…

민주 공심위 ‘금고형 이상 공천 배제’에

“박지원·김홍업 지지” 지방의원들 곤혹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자 특정 후보 지자를 선언한 목포, 신안, 무안군 지역 지방의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공심위의 결정으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김대중(DJ) 전 대통령 측 박지원 비서실장(전남 목포)과 DJ의 친남 김홍업 의원(전남 무안·신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지방의원은 6일 현재 전남도 의원 5명과 시,군의원 22명 등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들은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박 지원 실장과 김홍업 의원의 공천 배제가 가시화되자 정치적 행보를 중단한 채 추 이들을 관망하고 있다. 이들 지방의원은

정치적인 해결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면서도 박 실장과 김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할지, 의리를 지켜야 할지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목포시의회의 한 의원은 “박지원 예비후보 지지를 전명한 의원 대부분이 공심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탈당해 도울 생각”이라며 추후 사태 전개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 지역의 경우 박지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의원들과 협력인 이 상열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양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순천 예비후보 ‘불법 미행·도청’ 파문 확산

경찰,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착수

전남 순천에 통합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일부 예비후보들을 누군가 불법 미행하고 도청했다는 주장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경찰서 윤장현 수사과장은 6일 “구희승 예비후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불법 미행·도청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정식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민간인이 예비후보를 미행하고 캠코더로 후보의 움직임을 촬영한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캠코더로 촬영한 사람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김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구 후보 측 핵심관계자인 한모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희승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달 28일 자신을 김모씨라고 밝힌 남자가 우리 선거캠프의 핵심관계자인 한모씨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한 뒤 내 차량과 육성을 몰래 녹화·녹음한 캠코더 화면을 보여주면서 ‘심각한 사태’가 될 수 있다. 다른 예비후보도 미행·촬영했는데 더 심각하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9@

[종합·해설]

4·9 총선 현장

강운태 “당선되면 민주당 재입당 추진”



○…강운태 전 내부무관이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민주당의 ‘복당 불허’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총선 무소속 출마 및 당선 후 통합민주당 입당 추진 등의 계획을 발표.

강 전 장관은 복당이 불허된 데 대해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입당을 신청했는데 거절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결과적으로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다”고 언급.

강 전 장관은 이어 “8년 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남구민의 혁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당선이 된다면 통합민주당 내부 문제점의 개선을 전제로, 입당을 재추진할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

박주선 “지역간 불균형 해소돼야”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6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복지비 지출이 대폭 늘어났지만 계층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과 차상위계층의 복지대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가 추진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

지병문 “주거환경개선, 국가가 나서야”



○…통합민주당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6일 방림동 주거환경개선 추진위원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

지 의원은 이날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은 폐쇄적 삶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지적.

강기정 ‘건강 검진법’ 제정 기여 감사패 받아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강검진 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감사패를 수상.

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는 7월 시작되는 건강검진기본법 등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조영택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시행해야”



○…조영택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 예비후보는 6일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 후불제 시행을 제안.

조 후보는 “대학생 한 학기 등록금이 1천만원에 달해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에 입성, 외국에서 시행중인 등록금 상한제를 입안, 시행하고 대학생이 졸업을 한 뒤 소득이 생기면 등록금을 내는 후불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

임내현 ‘노인복지정책’ 의견 청취



○…임내현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6일 북구오치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정을 찾아 노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노인복지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임 후보는 이날 “국회에 입성,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비롯, 노인복지시설과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활동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

김영록 ‘농어촌·노인 복지정책’ 앞장



○…김영록 통합민주당 해남·완도 진도 예비후보는 6일 해남읍·면 노인회를 차례로 방문, 농어촌 복지정책과 노인 복지정책을 제시.

김 후보는 “농어촌의 실질적 노인 복지시설인 마을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 복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국고 차등지원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

김동신 “문화 북구 토대 구축 앞장”



○…김동신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6일 중흥동 북구 문화원을 방문하고 “문화북구를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김 후보는 “문화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이면서 동시에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상품”이라며 “강력한 문화인프라를 축조, 광주 문화수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

김경진 “청년실업 타개 위해 노력”



○…김경진 무소속 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6일 전남대 후문 학원과 및 북구청 인근을 돌며 “청년실업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부장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같은 제도가 접차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유종필 “중학 신입생 진단평가 재고를”



○…유종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 예비후보는 6일 광주시를 비롯,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와 관련, “본래 취지와 달리 줄 세우기, 사교육비 증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고사 등 ‘자율’과 ‘ 다양화’로 포장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을 지나친 성적 경쟁으로 내몰고 계층·지역 간 차별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국회에 입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정책을 내놓겠다”고 다짐.

서정성 ‘매니페스토 시민 TF팀’ 모집



○…서정성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6일 매니페스토(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 시민 TF팀을 모집키로 해 눈길.

서 후보는 “이행 가능성과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제시한 구체적 공약을 내놓기 위해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경제·교육·복지 등 주제별 분과를 설치해 전문성을 도모하면서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유권자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다짐.

오형근 “노인 복지사업 더욱 확대해야”



○…오형근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6일 실내의료산업 특구 조성 등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

오 후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령 인구가 많은 북구의 현실을 감안, 노인 복지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조금 차등지원제를 통한 재원확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승완, 무등시장 돌며 표심잡기 주력



○…하승완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6일 남구노인복지회관과 무등시장을 찾아 노인 및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민심잡기에 주력.

하 후보는 이날 “서민들의 삶을 모르면 시민들을 위한 정책도 내놓을 수 없다”면서 “현장 근로자부터 대학교수까지 지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치를 펼쳐겠다”며 지지를 호소.

정기남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앞장”



○…정기남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